탈락 후보 지지 여부·국회의원 '복심' 경선에 큰 영향

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 6곳 관전 포인트

강진 전·현직 대결 팽팽…순천 '세 불리기' 총력
여수, 지역구 통합 앞두고 국회의원들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결과 과반 득표를 넘지 못하고 2차 경선(결선 투표)을 앞둔 선거구의 최종 공천자가 누가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차 경선의 벽을 넘지 못한 탈락자들이 2차 경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여부에 따라 공천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 결선 투표에 오른 후보자들은 탈락 후보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세 결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복심'도 결선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점 등으로 오는 4~5일과 5~6일에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지역은 ▲여수(권오봉·정기명) ▲순천(오하근·허석) ▲강진(강진원·이승옥) ▲완도(김신·신우철) ▲장흥(곽태수·김성) ▲무안(이정운·최옥수)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결선에 오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마지막 결선 투표를 앞두고 '이합집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강진의 경우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서채원 예비후보가 이승옥 현 군수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승옥 현 군수 대 강진원 전 군수 간 결선 투표 대결이 팽팽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현직 군수의 맞대결인 만큼 탄탄한 조직력과 인지도 등에서도 서로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도 최종 경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완도에서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신영균 전 완도군 미래해양사업단장과 지영배 전 전남도 국장이 2일 김신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김신 전 군의원과 신우철 현 군수가 대결하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반(反) 현직 군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신 군수도 공천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박인철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을 받아 세 불리기에 나섰고,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2차 결선 투표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순천시장 경선도 2차 결선투표를 앞두고 세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장 경선은 오하근 전 전남도의원과 허석 현 시장이 결선 투표에 오른 가운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손훈모 변호사가 허 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 조직들이 모두 결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2차 결선 투표에서 파괴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안군수 경선에서는 이정운 전 무안군의원과 최옥수 전 무안군 산림조합장이 2차 경선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삼석 의원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 된 뒤 재심 인용을 통해 1차 경선에 합류한 뒤 2차 경선까지 오른 최 전 조합장의 상승세도 주목된다.

특히 무안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천을 받더라도 현직 군수인 김산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두 후보 가운데 본선 경쟁력 여부가 최종 경선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흥군수 경선에서는 애초 7명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1차 경선을 거쳐 곽태수 전 도의원과 김성 전 군수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따라서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경선을 포기한 예비후보들이 결선을 앞두고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힘의 균형이 한 방향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장 후보 경선은 권오봉 현 시장과 정기명 변호사 간 2차 결선 투표 대결로 압축된 가운데 권 시장은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강화수 예비후보와 2일 공동정책 추진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 결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을로 나뉘어진 만큼 향후 차기 총선에서 승리를 담보할 지지 조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여수는 차기 총선에서 갑·을 지역구가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선투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한편, 2차 결선투표가 치러지는 전남 6곳은 무안 경선만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文 대통령 '검찰개혁법' 거부권 행사 안할 듯

오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본회의 통과 시점따라 시점 유동적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 국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3일 오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두 법안에 대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공지했으나,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도 오전 10시에 예정된 만큼 국무회의는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잘된 합의"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 이 법안에 한때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기념해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장관급 정부 기관장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낮에는 김 총리와 마지막 주례회동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세 분의 국무총리와 148회 오찬 주례회동을 했고 1449건의 안건을 논의했다"며 "주례회동은 대통령과 총리·내각 간의 국정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원활한 국정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책임총리제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개혁법안 입법 완료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일제히 압박을 가하는 등 '마지막 저지'에 나섰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3일 열리는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의석수에서 밀려 법안 통과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연합뉴스

문 대통령 '마지막 사면'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공식 논의된 바도 없고 사면에 대한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사면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적어도 2일 오후까진 법무부 사면심사준비위원회가 열렸어야 했다는 점에서 사면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2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고심했으나 결국 임기말 마지막 사면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최근 여야가 이른바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을 두고 정면충돌, 정국이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밀어 붙이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사람만 사면하기도,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넣기 식으로 사면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성격상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어서 자기 명분과 논리가 강하다"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도 가뜩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하게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끼워넣었다'는 정치사면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문 대통령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로 쏠리게 됐다"며 "이런 극한 대립의 상황에서 사면까지 하는 것은 적지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바로 잡습니다

광주일보 2일자 3면 '현역시장·군수 강세…탈락 후보 무소속 출마땐 불꽃 튈 듯' 제목의 기사 내용 중, '이상익 영암군수'를 '이상익 함평군수'로 바로 잡습니다.